
[기자회견]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1 개의 메일

2008년 6월 15일 오후 5:12

진보네트 워크센터

시행일자 : 2008. 6. 16(월)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진보네트워크센터

내 용 :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과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

담 당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보 / 도 / 자 / 료]

인터넷 강국? 한국은 인터넷 정책의 후진국이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고, 국제사회 유례없는 전의경제도를 폐지하라!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6월 17일부터 18일,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OECD 장관회의가 COEX에서 개최됩니다. 16일에는 사전 행사로 시민사회/노동계 포럼, 비즈니스 포럼, 인터넷 기술 전문가 포럼 등 이해당사자 포럼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정부는 이번 OECD 장관회의를 통해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하고, '정보기술 코리아 글로벌 세일즈'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지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과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인터넷 강국'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의 정보통신 정책은 공공성과 인권에 대한 고려없이 기업의 이익과 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개인정보 감독기구 설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 민간 및 공공 영역에서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수집과 남용,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전자여권의 도입, 통신 기록의 보관 의무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인터넷 실명제와 정부의 자의적인 검열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에 이번 OECD 장관회의를 맞아, 한국의 반인권적 정보통신 정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3. 한편, 정부의 졸속적인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하는 촛불 시위가 1달여가 넘도록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기는 커녕, 인터넷을 통한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 하고, 평화로운 촛불 시위에 대해 물대포와 방패, 진압봉과 군화발을 이용한 폭력적인 진압을 자행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본적인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독재정권 시절의 경찰 폭력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OECD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국내외 참가자들 앞에 경찰 폭력의 실상을 폭로하고, 이제라도 한국 정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더불어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 2008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

장소 : COEX Grand Ballroom 101,102 (코엑스, 그랜드볼룸 101, 102호) 앞 로비

주최 :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